

기업간 협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전향옥* · 현병환**

I. 서론

글로벌 경제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의 제품을 벤치마킹 하고, 신속한 추격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기술차별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는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간 네트워크 경쟁력이 기업산업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서 자본, 인력, R&D 등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의 협업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7년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협업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협업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조류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협업지원제도를 시행한지 9년이 되어가지만 중소기업의 협업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중소기업협업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 우리 정부의 협업사업지원제도를 현황 및 평가를 통해 국내 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II. 본문

1. 협업의 개념

협업은 사전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노동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진 협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독자적으로 질 수 있고 각자가 공동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Gartner Group, 2001)정의 하고 있으며, Bedwell et al.(2012)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회적 존재가 하나의 공유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공동 활동에 상호적으로 참여하는 진화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Shergold(2008)는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협업이라 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기업간 협업의 개념을 정리하면 ‘기업간 협업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유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 전향옥,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010-2655-8532, sb703@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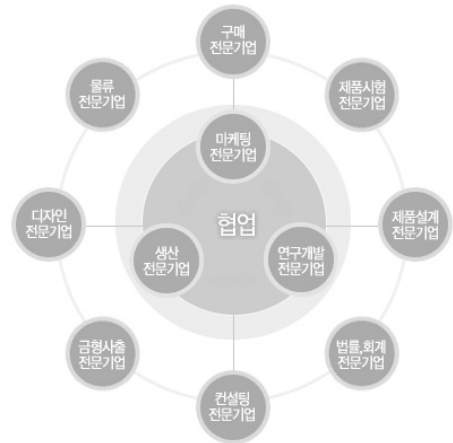
** 현병환, 대전대학교

2. 국내 중소기업 협업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협업 지원정책

정부에서는 협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협업사업 지원근거를 포함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안을 공포(‘07.1.26)하였으며, 2008년 2월부터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여 협업승인제도, 협업컨설팅, 협업융자 등의 시책을 지원하였다. 이후, 2009년 5월부터 승인협업체 지원을 위한 협업관리자(PM:Project Manager)제도를 운영 시작하였고, 2010년과 2012년에는 중소기업 기술 및 제품의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시장화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기업간 협업지원은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 역량분야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협업 참여기업들은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서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체를 구성하고,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업체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자금계획을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그림 1) 협업사업 모델

2) 추진경과 및 성과

‘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7건의 협업체를 승인하고, 301개의 참여 기업을 발굴하였으며, 298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2012년 11월 기준) 그 결과, 이러한 협업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은 신제품신공정 개발, 신시장 진출, 매출액은 협업사업 추진 전에 평균 31억 1천9백만원에서 사업추진 2차년도에 42억 4천만원으로 매년 1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협업 승인 및 융자 실적

구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합계
협업 승인건수	5	48	31	12	15	16	127
참여 기업수	15	112	76	30	34	34	301
융자실적(억원)	3	39	97	113	20	20	298

출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협업참여기업 매출액은 협업사업 추진 전에 평균 31억 1천9백만원에서 사업추진 2차년도에 42억 4천만원으로 매년 1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 협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시도할 때는 성공을 전제로 한다. 협업사업체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기업 각자의 성공이 아닌 상호 간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2009년 7월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업사업관련 협업PM을 수행하면서 많은 업체들을 모니터링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7년도에 협업승인을 받은 5개 협업사업 중 2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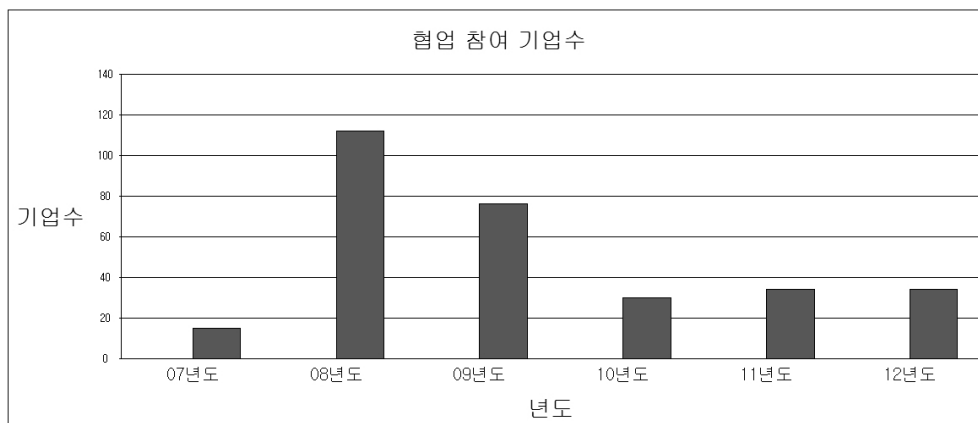
협업사업이 중단되었고, 2008년도에 협업승인을 받은 48개 협업사업 중 6개의 협업사업이, 그리고 2009년에는 23개 중 6개의 협업사업이 자금부족 또는 참여기업 간 소통부재로 인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취소되었다.

<표 2> 협업 승인업체, 취소업체 수

구분	2007	2008	2009	소계
승인업체 수	5	48	23	76
취소업체 수	2	6	6	14
취소업체 비율	40%	12.5%	26%	18.4%

출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협업을 통해 매출액 증가,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인 중소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협업사업을 시작한 몇 년 동안 협업승인을 받고도 지속하지 못한 비율이 18.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는 협업사업 실적은 현재의 정책이 협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협업 참여 기업 수

현행 협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2년에서 2014년 3년간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이라는 통계 조사 자료를 발표하였다. 조사 대상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부가 세제 및 정부 지원 자금 혜택지원을 일 순위로, 기업 간 협업에서 취득하게 되는 상대 기업의 정보에 대한 보안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다음 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사항의 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협업을 수행할 분야별 전문인력, 산업별 비즈니스를 고려한 프로세스 혁신 및 확산지원,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및 지원, 정보공유 필요성 인식제고, 인터페이스 변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타사정보 활용범위 제한지침 및 규정 제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망이 확보 되어있는 대기업의 경우 정보공유 보다는 협업을 수행할 분야별 전문인력과 비즈니스의 혁신 및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보다는 정보공유 필요성 인식제고에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협업에 필요한 타 기업의 정보를 쉽게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복수응답)

	단위(%)		
	대기업	중소기업	비고
세제 및 정부 지원자금 혜택지원	43.1	34.2	공동1위
보안채널 시스템 개발 및 보급	38.5	18.9	공동2위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및 지원	22.8	8.7	
정보공유 필요성 인식제고	21.5	17.5	
IT 및 Biz 전문인력 육성	28.1	9.2	
산업별 비즈니스를 고려한 프로세스 혁신 및 확산지원	25.4	8.4	
인터페이스 변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6.2	8.9	
타사정보 활용범위 제한지침 및 규정 제정	11.8	8	
전문 아웃소싱 기업 활성화	12.8	5.8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III. 결론

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 보안채널 시스템 개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정부는 종합적인 협업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협업사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공유가 협업장벽으로 조사되었다. 개별 중소기업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협업체를 구성해야하는 정부의 협업지원제도가 부진한 이유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지원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첫째 자금 지원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의 협업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세제 및 정부 지원 자금 혜택’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협업 지원 사업은 협업승인 기업의 용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협업 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협업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판로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하다.

둘째 협업관리자(PM)을 육성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협업사업계획이 승인된 기업에게 협업관리자(PM)를 지원하고 있다. 협업관리자는 법률, 경영, 생산, 기술, 판로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컨설턴트다. 협업관리자는 협업승인기업을 방문하여 협업사업 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업무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업관리자는 기업들이 협업을 하기 위한 정보공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국의 중소기업의 정보를 확보하고 협업을 컨설팅하는 협업관리자는 수도권/강원권 2명, 충청권 1명, 호남권 1명, 영남권 1명으로 전국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수치상으로 보아도 현재 협업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협업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관리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요 대기업과 상생협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화를 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경제환경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양극화는 경기변동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제 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간의 협상력의 차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대·중소기업 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거래선 확보가 어렵게 되고, 자생력 부족의 원인 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은 구조적인 기반 지원과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생과 동반성장의 의지를 통하여 현실적 추진을 할 수 있게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중대기업의 안정된 시장 확보와 경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분석.

POSRI 보고서 (2013)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이 ‘협업’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1) 협업DNA 중소기업 성장 위한 KEYWORD

산업연구원 (2012) 기업의 R&D글로벌 협력과 정책과제.

조운재 (2008) 협업사업모델을 통한 중소벤처기업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